

전주시의회원 5분 발언

# “내 지역만 아니면 된다’ 접근 안돼”

**박혜숙** “폐역사 대체부지 환영”  
**김진옥** “대체부지 물색 중단을”  
**백영규** 이벤트 중심 행정 질타  
**소순명** “효자동 장례식장 철거를”  
**서선희** “기업이익 환원 방안을”  
**고미희** “무단점유 사유지 대책을”

전주시의회 박혜숙, 김진옥, 백영규, 소순명, 서선희, 고미희 6명은 24일 제31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섰다.

▲**박혜숙 의원** ‘송천변전소 송천역 폐역사 대체부지 물색’ 환영

전주시의회 박혜숙 의원이 송천동 폐역사에 신축을 건립을 추진 중인 변전소 이전 부지 물색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박혜숙 의원

전주시의회 박혜숙 의원(송천1동)은 “송천역 폐역사 변전소 건립 사업이 늦게나마 전주시, 예곡시터, 한전, 주민, 국회의원, 시의원들이 함께하는 협의체가 구성돼 협의를 거쳐 대체부지 협의의 절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주민들과 함께 더 큰 희망과 기대를 전한다”고 환영했다.

박 의원은 “송천동 주민들은 송천폐역사 변전소 부지의 선정 부적합성, 주민 사전 공청회 등 소통 부재, 변전소 전력선 지중화 매설 관련 전자파 노출 문제 등을 들어 변전소 이전 부지 재검토를 촉구해왔다”며 “이제라도 지역민들과 협의를 통해 변전소 대체부지 물색에 나선 전주시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진옥 의원** ‘송천변전소 대체부지 물색 중단해야’ 주장

전주시의회 김진옥 의원은 전주시의 송천동 폐역사 건립 대체부지 물색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주시의회 김진옥 의원(팔복·조촌·동산·송천2동)은 “변전소 이전 사업은 ‘내

지역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정치적 이해타산을 따져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당초 송천동 폐역사에 건립을 추진하다 주민들의 반대에 막히자, 다시 일방적으로 송천변전소 이전 후보지를 송천2동과 팔복동 지역으로 물색하는 것은 송천2동 인근 지역민들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진옥 의원

김 의원은 “5월25일 전주시장실에서 정동영 국회의원과 김승수 전주시장, 한전 고위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송천변전소 이전을 결정, 이전 예정부지로 송천동 3곳과 팔복동 1곳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송천2동과 팔복동 주민들에 대한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변전소 대체부지를 검토하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영규 의원** ‘시민 혈세 낭비하는 이벤트 행정’ 비판

전주시의회 백영규 의원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전주시의 이벤트 중심 행정을 강력 질타하고 나섰다.



백영규 의원

백영규 의원(완산·중화산·2동)은 “민선 6기 들어 전주시가 이슈 선점과 이벤트성 행정에만 몰두해 현안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백 의원은 “전주시가 현안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슈 선점을 위해 ‘시민원탁회’라는 이름으로 전시성 행사에만 매몰돼 현안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10년이 넘도록 장기표류하는 전주종합경기장 재개발 사업도 롯데쇼핑과의 기부대양여 사업방식을 포기하고, 시 재정사업으로 방향을 바꾼 뒤 전북도와 갈등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난관에 봉착한 가운데 시민원탁회의에서 대형쇼핑몰 의견이 다시 나오는 못지 못할 상황까지 연출됐다”며 “이슈만을 쫓는

선심성 정책 낭비를 지양하고, 모든 시민을 위한 맞춤 시정에 주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소순명 의원** ‘효사랑요양병원 장례식장 사업 철거’ 촉구

전주시의회 소순명 의원은 전주효사랑가족요양병원의 장례식장 사업 철거를 촉구했다.



소순명 의원

소순명 의원(삼천1·2·3동, 효자·2동)은 “전주시 효자동 효사랑요양병원이 지역주민들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장례식장 사업을 추진,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며 “도심 주택가 한복판에 장례식장 설치하는 즉각 철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효사랑병원 앞 도로는 전주 서남부의 대표적 교통관문으로 웅망리고 개에서 박물관 일대까지 이어지는 도로는 심각한 상습 교통정체 구간”이라며 “효사랑요양병원에 장례식장까지 들어서면 수백여대를 들어 도로를 넓힌 교통체증 해소사업도 일거에 무용지물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선희 의원** ‘기업이익 지역환원 활성화 방안’ 주문

전주시의회 서선희 의원은 지역 내 기업이익의 지역 환원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적 방안 수립을 제안했다.



서선희 의원

서선희 의원(서신동)은 “전주시의 열악한 지방재정 자립 도로는 민간자본과 협력 없이는 정책 실현에 어려움이 크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시정에

민간자본이 투자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특히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도 총예산 1106억원 규모를 국비 30%, 시비 10%, 민자 60%로 민자가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경기 침체 속에 지역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 유치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한 “기업은 시장경제체제의 핵심조직으로 자원을 동원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기업의 사회참여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전주시도 기업의 공익적 부문에 대한 사회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고미희 의원** ‘도로 무단점유 사유지 대책 마련’ 촉구

전주시의회 고미희 의원은 전주시가 도로나 통행에 위해 무단점유한 사유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미희 의원

고미희 의원(비례대표)은 “시가 시민의 사유재산에 무단점유하고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매입하거나 사용료 지불 등 아무런 보상도 않고 있는 사례가 많다”며 전주시가 무단점유한 사유지에 대한 보상 대책을 주문했다.

고 의원은 “시에 있는 상당수 현황상의 도로부지에 사유지가 포함된 경우가 많다”며 “토지주가 있는데도 현황상의 도로라는 이유로 토지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될 말”이라고 강조했다.

도로 사용을 목적으로 복개된 하천, 구거 부지나 제방도로, 새마을사업 등으로 마을 주민이 공동 설치하였거나 또는 지치단체에서 설치한 마을 진입로 등이 현황상의 도로에 포함된다.

고 의원은 “전주시의 재정상태에서 당장 현황상의 도로에 포함된 사유지 매입은 어렵겠지만,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시민의 권리를 찾아주는 능동적인 시민행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더민주 도당, 6.25 전쟁 66주년 맞아 호국영령들 애국·애족 정신 새겨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하 전북도당)은 6.25전쟁 66주년을 맞아 “전쟁에서 희생된 모든 분들과 조국을 위해 순국하신 호국영령들의 넋을 추모하고 그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가슴 깊이 되새겨 본다”고 전했다.

전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순국한 수많은 호국영령들이 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자유를 누리고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뜻을 제대로 받들기 위해서라도 ‘통일’을 우리 민족 최대의 과제로 인식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기반 조성에서 야가 초당적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당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이 믿고 안심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예비역 장성과 영관급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방정책 전담기구인 국방안보센터를 설치했다”면서 “다시한번 6.25전쟁 66주년을 맞아 우리 민족 모두에게 전쟁으로 인해 치러야 했던 값비싼 대가와 교훈을 돌아보고, 평화의 참뜻과 가치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도선관위, 하반기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안내 및 위법행위 예방활동 등을 수행할 2016년도 하반기 ‘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총 17명으로 도선관위 2명, 각 구·시·군선관위별로 1명씩이며 지원 자격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에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다. 지원서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관계서류를 구비해 도 및 군부서 희망하는 구·시·군선관위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등기우편,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합격자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친 후 7월 20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된 ‘공정선거지원단’은 오는 8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선관위 홈페이지(<http://j.nec.go.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도선관위 지도도 또는 각 구·시·군선관위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광영 기자

## 김관영, 사고 이력 사업용 자동차 정비 의무화 법률개정안 발의

국회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군산)은 23일 중대사고 이력이 있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점검 및 정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사업용 자동차는 등록 자동차의 6.1%에 그치는 반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904명으로 전체의 19.6%를 차지하고 있다.

또 전체 교통사망자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4년 보다 오히려 23명(2.8%)이 증가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관영 의원은 “특히 사업용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치사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중대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용자동차 만이라도 임시검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교통사고와 미세먼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국민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힘쓰겠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 국민의당 군산 지역위, 워크숍 개최

국민의당 군산 지역위원회가 24일 20대 국회 첫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천정배 공동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당 소속 시·도의원들이 전원 참석했다.

군산 지역위원회는 군산지역의 비전을 공유하고 정권교체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호남주도 정권교체의 길, 자구구국의 길을 감시’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와 국민의당 역할’, 김관영 지역위원장은 ‘새로운 군산의 미래’라는 주제로 특강에 나섰다.

신광영 기자

## 조배숙, ‘탄소산업 클러스터 추진’ 산자부에 촉구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익산)이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조속한 예타 통과와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발췌하고 나섰다.

조배숙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 하고,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부겸·안희정·손학규... 불붙은 野 대권 경쟁

이달이 대권 도전 의사 밝혀 문재인 독주 체제에 뛰어들어

### 박원순, 사고 수습 후 나설 듯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23일 당권 내신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손학규 전 고문도 정계복귀 선언 압박을 받으면서 당내 대권주자간 경쟁에 일찌감치 불이 붙는 모양새다.

먼저 김 의원은 이날 오전 8·27 전대에 불출마합시다란 제목의 발표문에서 “남은 것은 정권교체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다. 지금부터 그 역할을 진지하게 숙고하겠다”며 내년 대선 후보 경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의원에 앞서 전날에는 친노무형계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대권 도전 의사를 재확인했다. 안 지사는 민선 6기 중간결산 기자간담회에서 “안희정 불펜투수 등판론에 대해 ‘내가 말하는 불펜투수는 보조 개념이 아니고 특정 후보의 대체개념도 아니다’라면서 ‘박원순·문재인 등 많은 선배들에게 대한 후배로서 예의를 갖춘 표현이었지(나는) 보완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 지사는 출마 선언 시기와 관련해선 “나서야 할 때가 된다면 너무 늦지도 성급하지도 않게 결론내리겠다”며 “각 정당에서 경선 절차를 발표하고 경선 후보자 참여 일정이 결정되는 연말쯤이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 비주류 의원들의 지지를 받는 손학규 전 삼민고문도 정계 복귀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손 전 고문은 23일 광주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김중권 더민주 비상대책위 대표와 만나 이같은 뜻을 밝혔다. 김 대표가 “서울 올라오셔야죠”라고 말하자 손 전 고문은 “이제 올라가야죠”라고 답한 것이다.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무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손 전 고문의 복귀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손 전 고문이 강진 첩거 중 작성한 글을 모아 책을 발간할 예정이라 발간 시점이 정계복귀 선언과 맞물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다른 대권주자 박원순 서울시장도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후 주춤하고 있지만 사고의 파장이 잦아들 때쯤이면 다시 대권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당내 대권경쟁의 열기가 뜨거워

지는 가운데 임기를 2개월여 앞둔 김중권 비상대책위 대표가 문 전 대표를 제외한 대권 주자들을 두루 만나고 있어서 주목된다.

김 대표는 이날 손 전 고문과 공개적으로 만난 것 외에도 최근들어 박원순 시장과 안희정 지사, 김부겸 의원 등과 잇따라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2012년 대선에 이어 다시 ‘김 메이커’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김 대표가

당내 최대 계파인 친노무형·친문재인계에 대항하고 있는 비주류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한 비주류 의원은 “김 대표는 당대표니까 잠재적 대권주자들을 만나는 것은 당연하다”며 “지금 문재인 전 대표 혼자 나와서 당의 대선주자가 된다면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아무 경쟁 없이 본선에 나가면 당선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